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김 영 진*

1. 문제의 제기: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내지는 당사자 간의 긴장완화로 동북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실제 5개항으로 된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방북성파에 대한 대국민보고에서 "이제 4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4대국이 우리 시장으로서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라고 하였다.²⁾

그런데 '자주'(independently)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이래로 남북한 사이에는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자주'라는 단어를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의 의미로 사용해 왔다. 이에 반해 북한은 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외세 배격'을 강조해 왔다. 논란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6월 14일 오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대통령과의 공식면담에서 '자주' 원칙과 한·미·일 공조 문제의 상관 관계를 거론했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공조체제와 자주적 문제해결은 모순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3국 공조는 북측에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모두 이기는 윈-윈 정책"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6·15 선언에서 '자주'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나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배격의 입장을 포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민족문제의 당사자 해결이라는 남한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해당 조항이 한·미·일 공조의 배경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주장을 남한이 수용한 것으로 본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 북과 남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이며, 중국은 북과 남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³⁾고 하였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중국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들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정상회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6월 15일자의 중국 외교부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과 한국 대통령 김대중 사이의 정상회담은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순조롭게 종결되었다. 쌍방은 상호이해를 증진시켰고, 국가통일의 자주적 해결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5 가지 합의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번 평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건이며, 이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귀중한 공헌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회담이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하여 충심으로 기쁨을 느끼며, 아울러 축하를 표시한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통일 문제가 당사자 쌍방에 의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쌍방이 계속하여 화해와 협조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선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⁴⁾

중국외교부 성명도 장쩌민 국가주석과 비슷하게 당사자의 대화를 통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자주'라는 말이 갖는 이중적이고 일견 애매한 의미는 중국의 외교성명에서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외형상 중국은 남북한간 당사자 원칙의 입장에서 '자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한

* 국민대 교수

1) 『동아일보』, 2000.6.16. "사설: 6·15선언과 4강외교"(신문인용은 인터넷판에 주로 의거하였으나 일일이 웹소스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개 종이인쇄보다 하루 빠르기 때문이다): 김영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 전망과 한국의 對中정책」, 아태평화재단 정책연구 시리즈 00-01(2000.9), pp.3-4; 유석렬, 「정상회담 이후의 동북아 정세」, 『외교』, 제55호(2000.10), pp. 3-11.

2) 「대통령 방북성과 대국민 보고(200.6.15)」,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01Z01/Z0139.htm>

3) 『人民日報』(2000.6.16).

4) 『人民日報』(2000.6.15).

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중국은 그것이 무시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가 달라이 라마의 한국방문에 관련하여 한중관계 악화 등을 운운하면서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관철하고 있고,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것은 분명한 예이다. 그리고 위의 장쩌민 국가주석도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당사국이라고 함으로써 비주요 당사자라로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접근이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자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있어서도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한의 자주적인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진정한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당분간은 미국의 간여가 최소화되는 차원에서 남북한 자주적인 해결을 원할 것이지만 자신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서는 적극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판단이 현실적이다.

2. 남북 정상회담과 중국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중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한 주장에 따르면 어떤 다른 나라도 중국 만큼 한반도에서의 평화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⁵⁾ 특히 중국의 시각에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붕괴하여 남한에 의해 흡수되고 주한미군이 중국의 북경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난 6년간 북한에 많은 양의 식량을 공급해 왔고, 국제여론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켜 왔다.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는 남북한의 화해는 북한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의 결과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우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이 중국을 무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올해 3월 중에 남북한 장관급 특사가 상해와 북경에서 차례로 비밀접촉을 하였고,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송호경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 채택된 남북 합의서로 정상회담 개최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그 다음으로 회담 약 2주일 전인 5월 29일부터 3일 동안 김정일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은 중국이 이번 회담의 배후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에 불려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방문중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의도를 전달받음으로써 전통적인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⁶⁾ 그 외에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취재를 외국기자로는 러시아 1명과 중국 3명으로 제한을 두었고, 미국 기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도 있다. 우선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중국의 이해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최 자체의 성사를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남북한의 접촉은 거의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사실 4월 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은 매우 놀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월 말 김정일이 중국에 방문하여 회담을 하고 난 뒤에야 회담에 대한 중국 측의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고 한다. 김정일을 만난 주룽지 총리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일의 방중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김정일은 남북 정상회담이 김일성 시절에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다만 자신이 몇 년전 교통사고로 대뇌를 다쳐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다만 주룽지 총리는 자신이 보기에 원래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압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⁷⁾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직접 남북정상을 모이게 하였다고 보는 시각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정일의 방문으로 상징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속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 길림성 동북아 연구센터 소장 진용산은 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매우 중국적인 상황 판단에 입각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5) Elisabeth Rosenthal, "The Korean Breakthrough - Beijing: China Hopes to Benefit From Korean Talks", *New York Times*, June 16, 2000. NYT Archives Article.

6) 국내 언론에서는 1)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의중 파악, 2) 북미·북일 회담과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에 대한 원군으로서 중국의 지지확보, 3) 중국의 개혁·개방의 노후우 학습, 4)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한매일』(2000.6.1).

7) "最新揭密: 中國在南北韓峰會中的角色", <http://www.toptomorrow.com.freebbs/chinas/messages/660.shtml>.

“오랜 기간 한반도에선 자주 군사 충돌이 발생, 동북아의 화약고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미·일·한 3국은 군사 협력이 커다란 진전을 이룩, 북한에 대항하는 3각 군사 협력체제를 형성해 역내 군사균형을 깨뜨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를 공동 연구 개발, 역내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장차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 동북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면, 동북아와 아태 평화와 안정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⁸⁾

중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남북한의 화해에 대해서 미국이나 특히 일본이 더 불안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략적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남북한의 직접적인 접촉이 한미일 3각 협력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한반도 정세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위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도 중국의 한 국제연구소 전문가는 남북 정상회담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한미일 3각 협력관계로부터 남한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남한에) 상실할 수 있다는 것, 한반도 평화과정이 빨라질 경우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일방위 협력 지침 및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군사적 활동영역의 확대나 미국과의 협력 근거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등이다.⁹⁾ 또 일본은 남북정상회담, 김정일의 중국방문, 푸틴의 북한방문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에서 자신이 소외된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얻어 국제문제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일본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¹⁰⁾

중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그 근거가 허박하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실제 남북정상 회담이 기존에 미국과 일본 위주의 북한 접근을 벗어나 남북한의 직접적인 담판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으로서는 불안감을 야기시킨 면이 없지 않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남북한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였고, 미국의 정부와 언론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한 정상이 합의를 이룬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양국이 이 합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논평하였다. 그는 또한 주한미군의 향후 위상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반도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도 14일 “현시점에서 장기적 영향을 추측하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의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가 미사일 방위(NMD)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¹¹⁾ 6월 15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크롤리 대변인도 “50년간 계속된 한반도의 긴장이 한 차례의 만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북한의 계획에는 아직까지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우리는 위협 평가를 바꾸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¹²⁾ 약 1주일 후 중국을 방문한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남북정상 회담으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유보적인 태도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것임은 틀림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합의선언이 자신은 물론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수복하고 유럽 각국들과 국교를 수립해가고 남한과 화해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뒤지지 않을까 하는 초조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북한에 대한 50만톤의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북일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배경하에서 국내 전문가들도 6·15 선언에 따른 남북간 화해의 정세변화는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 중국의 이익과 가장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이다. 우선 한반의 평화분위기는 중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한 미군의 위상에 대한 의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실제 대만문제와 전역미사일방어 체계(TMD)의 대만포함 등으로 미국과 세력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6월 22일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에 즈음하여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NMD와 TMD 체계가 설 토대를 잃었다고 계속해서 말해 왔으며, 남북한 정상회담은 우리의 주장을 더욱 확연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¹⁴⁾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를 미국의 방위력 강화의 명분은 물론 나아가 대만에

8) 「조선일보」(2000.5.31).

9) 李軍·陳曉遠(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朝鮮首腦會晤的意義及影響」, http://www.cctv.com/specials/nanbeihutan/plfx/fx18/html_2/3.

10) 朴鍵一, 「嘉賓訪談: 朝鮮首腦會晤 中國社科院亞太所朴鍵一博士」, 「人民日報」(2000.6.13).

11) 「조선일보」(2000.6.15).

12) 「중앙일보」(2000.6.17).

13) 「조선일보」(2000.6.23).

14) 「조선일보」(2000.6.23).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귀국보고에서 자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

대한 무기판매 등 영향력의 유지 근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당사자간 자주적 문제해결은 대만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자신의 통일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¹⁵⁾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년간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원자재 공급을 해 오고 있는 중국으로서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체적인 남북한 접근과정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촉각을 세우고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 긴장완화에 따른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자신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 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의 파오지옌이(朴鍵一) 박사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정상회담이 현실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즉 그에 따르면 50여년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과 남북한 정치구조의 큰 차이점 등으로 남북이 민족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은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그 과정은 매우 순탄치 않을 것이다.¹⁶⁾ 이러한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판단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낙관을 불허한다는 현실과 더불어 문제는 단순히 남북한 당사자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요컨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중국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해결의 가능성, 즉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의미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의 감소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해 온 상황에 변화를 의미한다. 나아가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따라서 미군의 주둔근거가 약화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정세변화의 구체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3. 한반도 문제해결과 중국

3.1. 사례 1: 주한미군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시화된 한반도 평화정착 무드로 인해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한반도 질서에 변화를 수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문제도 중요한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이 남북화해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측의 분명한 태도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오히려 남북 화해의 분위기 하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근거가 회박해진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문제를 쟁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이번 남북정상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분위기를 암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6·15 남북 정상회담 및 그 이후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논의되었거나 논의되어 왔는가?

우선 해당 문제에 관하여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우선 전제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¹⁷⁾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북한의 주한미군 수용에는 미군의 역할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군의 역지력을 제거함으로써 철군의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기도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⁸⁾ 미 국방장관 코언도 9월 19일 방한시에 “아시아·태평양 미군의 감

를 이야기했고, 북한도 주한미군 문제와 보안법 이야기 철책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2000.6.16). 클린턴과의 전화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꺼냈다고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도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2000.6.17). 그렇지만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2000.6.15). 중국의 언론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5) 서진영, 『金正日 왜 中國 갔나』, 『조선일보』(2000.6.2), p. 7.

16) 朴鍵一, 「남북정상회담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외교』, 제55호(2000.10), p. 36.

17)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특히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패권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2000.6.27). 이것은 중국의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미군주둔을 결단코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따귀를 맞은 격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任東來(2000), 『美平和解對中國的影響』, 『聯合早報』(2000/10/25), <http://www.zaobap.com/special/korea/pages/korea251000.html>.

축요인이 전혀 없다. "미국은 2005년 이전에는 아태지역에 10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아울러 그는 주한 미군의 장래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모두 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⁹⁾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중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존립근거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사실 중국은 이제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일본과 남한에서의 미군주둔은 역사의 유산이며, 따라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⁰⁾ 이것은 미군을 당장이 아닌 점차적인 방법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정부가 주한 미군을 적어도 통일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분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6월 18일 방한한 양청췌(楊成瑞) 국제문제연구소장 등 대표단이 외교안보연구원을 포함한 국제연구소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은 현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발생할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공백상태를 우려하고, 일본의 군사력 개발이나 군사대국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 물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고 오히려 정부관계자가 아전인수격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관련하여 뉴욕 타임스는 지난 2000년 10월 15일자 보도에서 주한 미군은 지난 50여년 간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간에 과거부터 이어져온 경쟁과 적의가 흘러넘치는 것을 막은 병마개 역할을 해왔다"면서 남북한의 화해와 궁극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고조되면서 주한 미군의 철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 행정부에서는 성급한 주한 미군의 성급한 철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남북한 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지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남북한 화해 분위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적어도 그 지위변경에 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즉,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화해가 이뤄질 경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진정한 평화가 조성된다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엄청난 압력이 일게 될 것"(미 의회조사연구소의 안보전문가 로버트 골더), "앞으로 10년간은 여전히 미군의 한국 및 일본 주둔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 형태나 배치 등은 크게 달라질 것"(퇴역 육군대령인 래리 위츨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등의 언급이 알려지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지도 국방부 등의 안보전문가들을 인용해 "남북한의 화해가 결국 주한미군 감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²²⁾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사실 양면성을 갖는다. 첫째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한반도의 불안정을 줄이는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은 중국 자신을 견제하는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단기적으로 다시 말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중국으로서는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견제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 내지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결코 바람직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중국은 국경선 부근의 미군주둔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중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었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점차 제기할 것은 자명하다. 동북아 정세변화나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의 주둔에 관해서는 위에서 인용한 파오지엔이 박사는 비록 "통일된 조선(-원저자)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하였으나 미국이 남한에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²³⁾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및 지위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주요 관심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방중기간에 남북간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3.7만 미군의 계속 주둔을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군의 주둔이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결과로서 미군주둔의 종결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며 그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00년 10월 하순 주룽지 총리를 수행하고 있던 중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4차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지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존재에 대해 "역사가 남긴 문제이며, 곧바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 미군의 존재가 평화협정의 체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18) 「주한미군 '역할'을 바꾸자?」, 『조선일보』(2000.7.25).

19) 『한겨레신문』(2000.9.19).

20) 선귀광(沈國放)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97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즉 "중국은 원칙적으로 외국군대의 해외주둔을 반대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역사가 남긴 문제다. 평화체제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일단 평화체제가 수립된 이후라면 다른 문제의 해결은 쉬울 것이다." 『서울신문』(1997.8.22).

21) 『조선일보』(2000.6.30).

22) 『한겨레신문』(2000.6.22).

23) 朴健一, 「嘉賓訪談: 朝鮮首腦會晤 中國社科院亞太所朴健一博士」, 『人民日報』(2000.6.13).

을 의미한다.²⁴⁾ 현실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미 중국의 압목적 동의를 얻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종합컨대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환경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남한과의 경제적 협력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군의 주둔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적어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기될 것이다.

3.2. 사례2: 한반도 통일과 중국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이 좀더 좁혀짐으로써 그에 관한 중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민족 스스로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²⁵⁾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고조된 분위기 하에서 한 중국학자는 통일의 구체적인 형태를 떠나 한반도 통일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²⁶⁾

첫째, 한국의 통일은 중국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대만정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둘째, 남북한의 통일은 중국정부의 정치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은 거액의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탈북자들은 중국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외교 방면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환경의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오늘날 동북아에서 중국이 처하고 있는 일종의 봉쇄 및 난처함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군의 철수여부나 일본의 군사대국화 여부에 상관없이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대한 봉쇄고리에 구멍이 생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비교적 회의적이다. 북한체제의 안정성 등 한반도 내부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예기치 못할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통일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리중(李琮)씨는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을 정리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통일은 남북한의 자주적·평화적 문제이며 다른 국가들이 간섭해서는 안된다.

둘째, 한반도 지역은 비핵화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문화교류가 유지·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한 공개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⁷⁾

중국은 각자의 국가이익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에는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간 쌍방의 문제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같이 특정한 국가가 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자신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그 방향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냉전시대 미·소가 독점해 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일본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²⁸⁾ 결국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이 참여하여 구체화되는 점진적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4) 「조선일보」(2000.10.21), “중국 한반도 평화협정지지”(일본의 마이니치 10월 21일자 신문에서 인용).

25) 「韓中修交聲明」, 第5項, 「人民日報」(1992.8.25).

26) 青松, 「中國樂見韓朝統一」, 『聯合早報』(2000/6/21), <http://www.zaobap.com/special/korea/pages/korea210600.html>.

27) 李琮(中國社會科學院 世界政治·經濟研究所 所長(1993)), 「한반도에서의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민족통일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93.10.18), pp. 70-71.

28) 최근 통일후의 한국이 친중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예로 Robert Johnson, “Korean Unification: Likely Major Powers Reaction”,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환경」, 1997, 8, 19

4. 결 론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세계질서와 적어도 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의 이해구조라는 좀더 큰 테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세계는 평화와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아태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안정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불안정 요소가 강화되는 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2000년 중국의 국방」에 반영되어 있다.

“... 세계의 불안정 및 불확실성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고, 별로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국가 간 힘의 대비는 심각하게 그 균형을 잃고 있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제정치 및 경제의 구질서가 아직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았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등 영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동시에 새롭게 강화되는 면이 있다. 일부 큰 나라들은 “新干涉主義”, “新艦砲政策” 그리고 新經濟植民主義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나라들의 주권독립과 발전이익을 해치고 있고, 세계평화와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아태지역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와 쌍무적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의 배치를 연구·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周邊事態法” 등을 확정하는 등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간 신뢰관계의 건설에 불리하다.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²⁹⁾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에 이해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주도의 동북아질서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은 한편으로는 질서유지를 위한 보수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위주의 질서를 고쳐나가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서 중국은 한편으로 한반도의 안정세력을 자임하였다. 이를테면 동북아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식량위기에 따른 체제위협)와 도발적인 행위(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미국이나 일본에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빌미를 주는 것)를 억제하고자 노력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를테면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재촉하고 있으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견 이중적인 이해구조는 축약하면 변화 가운데 안정(stability in change)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변화의 과정에 매우 민감한 관심과 반응을 갖게 만들고 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일단 열렸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표면적으로 당사자간 자주적인 문제해결 원칙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앞서 언급된 자신의 국가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종합컨대 동북아에서 자신의 이중적인 위상(현상유지와 타파) 그리고 한반도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교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수세에서 공세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은 아니더라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의 세력형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그에 대한 견제로 짐작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아직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균형잡힌 자리매김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 균형이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29) 「2000年中國的國防」, 『人民日報』, 2000.6.16. <http://www.peopledaily.com.cn/GB/channel1/10/20001016/273994.html>.